

# DJ, 대선 '훈수 정치' 본격화 하나

### 범여권 대통합 메시지 이어 대선주자·지도부 면담

### 내달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정계인사 대거 초청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범여권 대선주자들 잇따라 만나기로 하고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기념행사에 정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면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훈수 정치'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일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좌우간 내가 바라는 것 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당제일 것이다. 대선이 실시되는 금년 하반기에 가면 양당대결로 압축될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지 이후 강화되는 분위기다.

즉 범여권의 통합을 촉구하는 듯한 김 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특정인사 배제론' 이후 대통합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계권에 큰 파장을 던졌다. 더구나 김 전 대통령이 향후 면담할 인사들이 대부분 범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어서 이들과의 만남에서 제시될 김 전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열린우리당 대선주자인 김혁규 의원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 등 범여권에 포진한 대선주자와 지도부를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한 측근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3~19일 독일방문 이전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신당 김한길 대표, 민주당 박상천 대표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다"면서 "세부협약이 이뤄지면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면담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19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좌우간 내가 바라는 것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 박 대표의 '배제론'을 우회 비판했다는 해석을 낳은 것처럼 범여권 통합과 대선구도에 대해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내달 14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각각 대표와 대선주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6·15 남북정



전남대학교가 제정한 '제1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 수상자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2일 김대중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 김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상회담 7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를 예정이다. 이한동 전 총리와 국민의 정부 시절 각료들로 구성된 기념행사위원회는 정치인 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당시 수행원, 정·관·학·재계 인사 700여 명을 초청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내달 13~14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제목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13일 학술회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일정도 마련했다.

## "국민 알권리 박탈...신중 언론탄압"

### 정부 기자실 통제합...정치권·언론·학계 철회 촉구

정부가 22일 각 중앙 부처의 37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제하고 부처 사무실과 공무원 직접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개편을 강행,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치가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 직접 취재가 차단되면 기자들은 각 부처 대변인을 통해 나오는 '엄선된'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관련 단체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 등을 통해 "반민주적인 취재 통제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학자들까지 비판 대열에 뛰어들었다.

◇정치권=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박형준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편향된 시각과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기자실 폐쇄 조치가 명백히 반대한다. 불평하고 갈등하고 반박하는 방식의 언론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근태 전 의장은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하고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갑갑한 압축의 시대로 후퇴하게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말살한 21세기

최초의 독재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언론의 고유기능조차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논평했다.

◇언론학자=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향 자체는 옳지만 정부와 언론 간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개방형 브리핑 제도는 과거의 관연유착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관급 기자를 받아쓰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장룡 인제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기자실 통제합을 논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취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그러나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이후 일부 기관 송고실이 사실상 출입기자실화 되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는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언론탄압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보다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2030년 전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

(인구 5명중 1명 노인)

### 전남 2030년 2명이 노인 1.2명 부양해야

####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께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인구의 60%만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30년 16개 시·도 모두 초고령 사회=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오는 203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9.1%였던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1.0%, 2020년 15.6%, 2030년 24.3% 등으로 급증하게 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0년에 전체의 32.8%에 달할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어 ▲강원(31.1%) ▲경북(29.9%) ▲전북(29.8%) ▲부산(29.7%) ▲충북(27.6%)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고령인구가 2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 전남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05년 현재 63.9%에서 2030년에는 57.0%까지 낮아지면서 강원(59.0%), 전북(59.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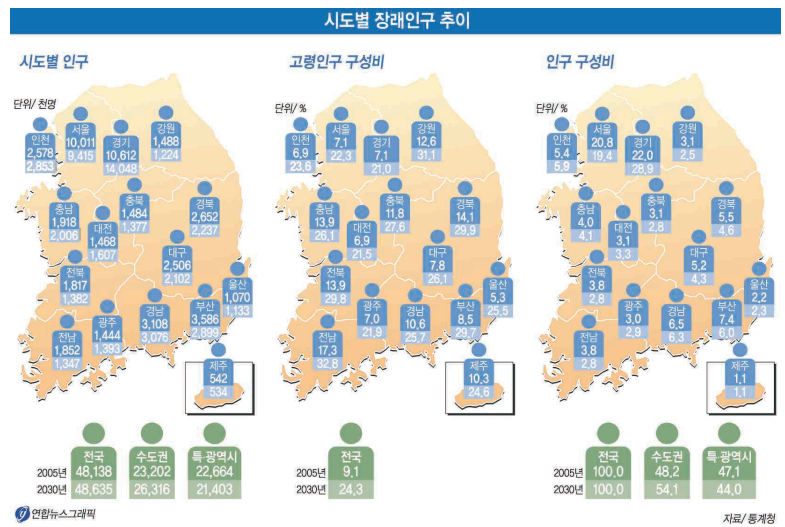
과 함께 산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10명중 6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1.4%에서 2030년에는 65.4%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고령층은 늘어남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전

국적으로 2005년 12.6에서 2030년 37.7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지역별 노년부양비는 2030년 전남이 57.5로 가장 높고, 강원(52.7), 전북(50.1) 등의 순이었다. 이들 3개 지역은 생산가능인구 2명이 고령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48.2%인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의 인구 구성비는 2011년 50.1%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뒤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남성들의 결혼도 날로 어려워



국적으로 2005년 12.6에서 2030년 37.7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지역별 노년부양비는 2030년 전남이 57.5로 가장 높고, 강원(52.7), 전북(50.1) 등의 순이었다. 이들 3개 지역은 생산가능인구 2명이 고령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2011년 인구 2명중 1명 이상 수도권 거주=향후 서울지역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지역의

질 전망이다. 전체 성비는 완화되지만 혼인 주연령층(20~39세)의 남성초과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을 비롯한 울산, 충북, 경북, 강원, 충남 등의 혼인 성비는 모두 120(남자가 여자보다 1.2배 많다는 의미)를 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111.8)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혼인 주연령층 남성들이 같은 지역에서 배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 국민 49% "올 대선 지역주의 심화될 것"

### CBS 여론조사... 광주·전남 57%로 전국 최고

노무현 대통령이 올 5·18 기념식에서 지역주의 회귀를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S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7%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지역주의가 예전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39.2%로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보다 10% 가량 적게 나타났다.

지역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은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66.9%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55.4%), 민주노동당(51.8%), 한나라당(48.0%)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응답자의 57.6%가 지역주의가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인천·경기(54.3%), 부산·경남(54.1%), 강원(50.8%)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53.3%)이 여성(46.3%)에 비해 지역주의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30대(63.5%), 40대(50.5%), 20대(44.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최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기원합니다!

2만 6천여 평의 호수공원과 풍영정전 조망의 **그린 프리미엄** 생활 **프리미엄**

복합상업시설 등 수완지구의 노른자위에서 누리는 **생활 프리미엄**

수완신도시보다 더 큰 세상- **피오레 NEW CITY**

**FIORE NEW CITY Blue Life**

오늘大공개! (5월23일 오후 2시)  
광천동 대주 주택전시관에서 만나는 대주건설의 야심작!

문의. (062) 367-3000  
**광천동 대주 주택전시관 GRAND OPEN**

※ 본 CG는 단지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분양문의 응도: 광주광역시 남구 남산동 1-1, 17-2